정치권, 미디어법 '샅바싸움' 뜨겁다

與 "합의대로 다음달 표결처리 해야"
野 "先 여론조사… 강행땐 물리적 저지"

국회가 휴회 중인데도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일 미디어법의 6월 표결 처리를 강조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선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여당이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미디어법 처리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법안에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위의 활동이 끝나면 표결처리 한다고 합의했다"며 "여론조사가 여론수렴의 절차라는 논리로 여론조사가 없으면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국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해서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일반법도 국민 생각을 담아야 하는데 민주 기본질서를 만드는 법은 당연히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월 처리 전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여당이 단독 제출한 법안을 그대로 독선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이미 약속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미디어 빅뱅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디어 법안이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미디어법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과, 방송 관련법 주무부처의 수장이 국외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6일 "언론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한 번도 변치않은 저의 소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특히 11일 오후 미디어법 처리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여당의 6월 처리 강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물론 '미디어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다각적인 저지투쟁 계획을 마련해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관악산에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산행대회를 갖고 31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자전거 행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법에 대해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100일의 활동시한은 12일 현재 한 달 남짓 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천정배(가운데) 의원 등 'MB 언론악법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 '합종연횡' 변수

박지원 가세로 더욱 혼미
비주류 단일화 움직임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투표(15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판세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특히, 동교동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박지원 의원의 경선 가세로 판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으며 비주류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막판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12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각 계파간 회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우선 비주류 연합체 성격을 갖고 있는 민주연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종걸 의원을 지지하되, 후보단일화 여부는 이 후보가 판단토록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비주류 연합체인 국민모임은 전날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모임을 갖고 이강래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후보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천 의원으로 대표되는 구(舊) 민주계는 오찬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3일이나 14일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 민주계는 당초 이강래 의원에 우호적이었으나 동교동계 출신의 박 의원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의원들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의견교환에 나서 13일께 지지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의 적임자를 선택하고 투표시에도 행동통일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김부겸, 박지원 의원은 일단 합종연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의 행보는 원내대표 경선 구도를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 박 의원의 선택에 따라 원내대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2차 투표에 합류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력과 경험 등을 감안할때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상당한 표심을 장악하면서 2차 투표에 합류,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종걸 의원이 박지원 의원과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김부겸 의원도 박 의원에게 '러브콜'을 던졌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귀국한 박근혜 다시 '침묵정치'

'조기 전대' 언급 자제·외부활동 삼가

미국에서 친이(친 이명박)계를 향해 거침없이 공격성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귀국 후 12일부터 다시 '침묵모드'로 돌아갔다.

전날 귀국한 박 전 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입을 닫았다.

조기 전대를 통해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소장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분간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대표의 면담 제안에 대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뾰족한 답이 나올 상황도 아닌데 굳이 만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 등 '민본21' 등의 면담 제안에도 비슷한 이유에서 부정적이다.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12일 "현재로서는 박 전 대표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당분간 특별한 외부 활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전형적인 '박근혜식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표는 현안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은 하되, 한 번 입장을 밝힌 이후엔 이를 뒤집지도, 그렇다고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도 않는 행보를 이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정동영 "곧 복당절차 밟겠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4·29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은 12일 "곧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5·18민중항쟁 29주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부인 민혜경씨와 지지자 등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사진〉한 정 의원은 "민주당이 현실에 안주하고 기득권에 만족해 쇄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권은 지킬지 몰라도 정권은 멀어지고 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불법시위단체 규정에 발끈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을 규정한 것에 대해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이 발끈했다.

천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불법폭력시위단체 현황'에는 국회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포함돼 있고, 본 의원실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